

화물연대 총파업 영향력 “별로...”

화물연대 소속 차주 1만5000명 불과 ... 정부는 운송방해 총력 대응

화물연대가 6월11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화물연대는 6월10일 오후 늦게까지 대한통운과 30여명의 미북귀 차주들의 북귀 및 화물연대 인정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해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정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화물차량은 총 30여만대로, 이중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은 1만5000여명에 불과해 이들이 단순히 파업에 그치면 물류에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화물연대의 파업이 100달러를 웃도는 살인적 고유가에 따른 생계형이었다면, 2009년에는 명분이 크지 않아 파업동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생계형 파업으로 화물연대 비조합원까지도 파업에 가세하면서 물류대란이 현실화됐던 2008년과 달리 화물연대가 <화물연대 노조 인정>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왔고, 협상 대상도 정부가 아닌 대한통운이라는 점도 파업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가 단순히 휴업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이미 파업에 돌입하기 전 항만을 봉쇄하고 고속도로를 점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실제 이를 실행에 옮길지가 변수로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막고,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우선 항만과 ICD, 고속도로 나들목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장소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차량 방치 등 불법행위를 하면 현행범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대체수송 계획도 세웠다.

군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사업용 8톤 이상 차량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도 관계부처들의 합동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1>